

송암·에너지밸리산단에 車부품 재제조 단지 조성

시, 450억원 투자 특화·R&D 구축 '이탈리아 스텔란티스 시설' 도입 미래차 소부장 연계 시너지 기대

광주시가 송암산단과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부품 재제조 기반을 구축한다. 광주에 자동차 재제조가 도입되면 송암산단 모빌리티 도시재생사업과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둘째날인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재제조 순환경제허브 기술포럼'에서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허브'는 송암산단의 자동차정비업체와 모빌리티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특화단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에너지밸리산단에 재제조 성능평가 및 인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을 하고, 재제조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지원의 선도시업으로 송암산단에 재제조 1단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완성차

참여를 유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사업의 모델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약 450억원의 국비를 받아 송암산단에 수거·분해·분류·선별할 수 있는 플랫폼, 부품재제조 생산업체,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등 재제조부품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제조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35개 창업, 직접 고용 17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경정비(카센터) 1000곳 가운데 50%인 500곳을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로, 판매가격을 신제품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가격경쟁력에 따른 구매가 늘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성능평가 연구개발(R&D)단지를 구축, 자동차부품 재제조 성능평가 지원과 재제조 기법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향후 완성차 업체로 참여가 확대되면 광주시는 자원소비 90% 감소, 고용 2.7배 증가, 경제효과가 높은 '자동차 생애주

기 완성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동차산업에서 '광주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허브'를 도입,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순환경제 허브 도입과 관련,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스텔란티스 자동차 재제조 시설을 주목했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및 재제조를 통해 '2038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서고 있어서다. 스텔란티스는 2038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약 600억원을 투자해 800만개 엔진, 기어

박스 등의 재제조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순환을 위해 재제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산업법' 등 재제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광주지역 건축전공학 대학생 및 건축 전문가 등이 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21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견고 싶은 도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교권보호 5법 시행' 1년...

1면서 계속

● 교사 퇴직·교대생 자퇴 늘어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설문조사에도 반영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와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이 교사 5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 장구가 일원화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다. 또 교육활동 침해 우려로 분리된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11.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학교사는 2019년 18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과 낮은 임금 등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자 '교육대학 인기'도 옛말이 됐다. 광주교대의 중도탈락자(자퇴생)는 2019년과 202년에 32명, 2021년에는 31명에 그쳤지만, 2022년 36명, 2023년에 47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의 안전이나 인권을 위협 받으면 회사 대표나 사장이 처벌받는 것과 달리 교권침해 현장에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도 행정이나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 권한으로 지방소멸 극복"

김 지사 "명실상부 지방자치 실현" "의대 공모, 공정성 담보가 최우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을 뽑는 것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

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중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뒤 도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트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선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자본감소(임의유상 소각)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중앙가나산업(이하 "당사")은 2024년 09월 0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 자본의 총액 금 43,400,000원을 금 34,700,000원으로 감소하고(감소되는 자본금의 액: 금8,700,000원) 1주당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870주에 대하여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 542,663원에 유상 양도받아 이를 소각하는 방식(임의유상)으로 발행주식총수를 4,340주에서 3,47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4일

주식회사 중앙가나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4. 세진빌딩 9층(지평동)
공동대표이사 이복주
공동대표이사 박선화

광양시 공고 제2024-2038호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4.

광 양 시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9	NJ52-1-28-079	공익용산지

- 개 소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25-3 외 3필지
- 근 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 내 용 : 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른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 지 정 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고시

2.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 제출방법 :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광양시청 산림소득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개인이나 단체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061-797-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산지구분도(안)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계획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2항,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내용의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전소명 : (유)주승에너지 외 29개소
· 세부 발전소 명 우측 기재

2. 설치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33-1번지의 71필지

3. 면 적 : 183,067㎡

4. 설비용량 : 30MW급 (1MW 30개소)

5.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9월

6. 운영기간 : 2024년 9월 2일 ~ 20년간

7.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8. 의견제출 및 열람요청 이메일 : ksl8862@naver.com
· 열람기간 : 2024. 09. 02 ~ 2024. 09. 08
· 열람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계획서

2024. 09. 02.

(유)주승에너지 외 29개 발전소

◎ 세부 발전소 명 (상호/대표자)		
(유)회송태양광	김남중	(유)금강2호태양광 윤찬국
(유)세비에너지	진인수	(유)용월2호태양광 이운상
(유)군회솔라	박환민	(유)동상에너지 김남중
(유)월연에코에너지	백종관	(유)움찬에너지 김남중
(유)한용에너지	차남두	(유)용월3호태양광 이운상
(유)별량주민랜드	박화숙	(유)주승에너지 차남두
(유)별량주민에너지	이운상	(유)금승에너지 김승리
(유)별량주민파워	차남두	(유)노승에너지 이운상
(유)별량주민파크	박환민	(유)신당에너지 공명환
(유)소희에너지	백종관	(유)덕인에너지 박화숙
(유)나눔에너지	박화숙	(유)노하에너지 박환민
(유)복용6호태양광	차남두	(유)금동에너지 차남두
(유)장전솔라	윤찬국	(유)수랑에너지 김승리
(유)찬늘에너지	백종관	(유)해월에너지 이운상
(유)도원경	김승리	(유)예동에너지 공명환